√ 하노이 회담 제재 관련 내용:

(北) 안보리 5개 제재 중 민수경제, 민생 관련 일부 해제

(美) 북한이 사실상 전면적 제재 해제 요구

※ 안보리 5개 제재 주요 조치

2270호(16.3.2):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민생용 제외)
2321호(16.11.30): 석탄 수출 제한(연 4억 달러 or 750만 톤)
2371호(17.8.5): 석탄, 철, 철광 / 수산물 / 납, 납광 수출금지
2375호(17.9.11): 섬유류 수출금지, 정유제품 수입 연200만 배럴, 원유 수입량 동결
2397호(17.12.22): 정유제품 연50만 배럴, 원유 연400만 배럴, 북 해외 노동자 소환

14

[수출입 현황]

√ 2017년 경상수지 적자, 약 20억 달러

- 수출: 17억 7천만 달러
- 수입: 37억 7천만 달러

√ 2018년 수입 33.4%, 수출 88% 급감

√ 2017년부터 물가상승률, 증가

15

[북, 대응 및 한계]

√ **시장 안정화 정책에 주력**

- 무역 질적 저하 + 수출입 급락
- '자력갱생' 강조 / 국산품 활용

√ 2018년부터 유동성 문제, 가시화

√ **국내 외환보유액, 감소 속도 증가**

16

[제재의 역설]

√ 대북제재 효과, 有

- **하노이 회담, 북 제안**

√ '컨벤션 효과' (convention effect)

- **각종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이미지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 상승**

17

[무역외 수지 증대]

√ ‘홍색(紅色)여행’ + 산업투자 방문

- ‘효도관광’ 인기 (중국 인민지원군 자녀들의 관심)

√ ‘무역외 수지’ + 이미지 개선

- 2018년 방북 중국인, 120만 명

- 최소 3백 달러 지출 = 약 3억 6천만 달러

- 2018년 수출(2억 1,314만 달러)보다 많다

18

[남북관계 전망]

√ 대북 제재 = 비핵화와 연동

√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

‘진정성’ ⇒ **‘비핵화’**

√ 제재 예외 공간을 통한 제한된 ‘발전’

19

[비핵화 과제]

√ 장기전 양상 / 이제 2라운드

√ '합의'와 '이행'은 별개

√ 사찰 통한 검증 가능해야 '비핵화' 시작

※ 관건: <challenge inspection> 가능 여부

√ **'핵화 실태' 파악해야** 비핵화 로드맵 가능

20

[남북관계 발전을 보는 관점]

√ **적대적 대결** (hostile relations)

√ **적대적 공존** (antagonistic coexistence)

√ **비적대적 공존** (non-antagonistic coexistence)

√ **비적대적 협력** (non-antagonistic cooperation)

21

발 표 문

한반도 정세 진단과 비핵화·평화 해법

박 영 호

(서울평화연구소 소장)

1. 지체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시작?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될 것인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됐다.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미·북 간 첫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진 한반도를 둘러싼 활발한 외교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 해에 남북 정상회담 3회, 북·중 정상회담 3회,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1회로 한반도문제의 1차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핵심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 간에 상호 연관된 정상회담이 이렇게 잇따라 개최된 적은 없었다. 그 결과로 남북 간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 미·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복원되었다.

미·북 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사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중단되었다. 판문점에 이어 평양에서만 세 번째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두 최고정책결정권자가 백두산 천지 앞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예술단의 교환 공연,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약간의 교류 등이 이루어졌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 사업 등 몇 가지의 군사적 조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과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를 하고 미·북 간 핵단추 공방을 벌였던 2017년의 긴장 고조의 상황과는

명백하게 대비된다. 지구적 차원의 냉전구조가 해체된 지 30년이 지나도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반도에 모처럼 다시 한 번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봄이 왔다" 면서 한껏 기대가 부풀었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협상과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협상은 합의 없이 조기에 끝났고 미·북 간 결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이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왕복 66시간의 긴 기차여행을 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 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다면서 미국이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 실현을 위한 '적대시정책' 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치적계산법' 의 변경을 요구하였다.[1)]

한편 김정은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인 2019년 1월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네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통적인 혈맹' 중국과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의 확고한 지지를 얻으려는 행보였다. 북한의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 행위이지만 한국에게 '외세 의존' 배격을 강도 높게 요구해오고 있는 김정은의 이율배반적 행위는 아닌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가운데 4월 2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고지도자 취임 이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근 악화한 한·일 관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문제에서의 일본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외교를 펼쳐오고 있다. 그리고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2)]

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연합뉴스』, 2019. 4. 12.
2) *Kyodo News*, May 10, 2019.

요컨대 2018년 초부터 2019년 5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북한, 미국 3자간에 각각의 양자 정상회담 등이 열리고 북·중 동맹관계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관여자로 참가하면서 한반도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또한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외부 관찰자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혹시나' 했던 '기대' 가 '역시나' 하는 '좌절' 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다소의 굴곡을 보이면서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그 속의 핵심 영향요소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은 찾아질 수 있는가?

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등장할 새로운 국제질서를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할 것으로 예측했다.[3] 독일의 통일, 소련의 해체, 무역 자유화와 자본의 세계화, 정보화의 확산 등으로 자유주의적 통합의 국제질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사의 변동은 그렇게 이상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았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인종·종교·민족 간 갈등이 분출하고, 극단주의 테러가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시민/민중의 힘으로 권위주의정권이 몰락한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적 정권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정권이 등장하였다. 무역 자유화와 자본의 세계화가 기대했던 인류의 공동 번영대신에 국제적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내부 수준에서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질서의 통합적 요소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분출하였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에서 강대국 간 안보 경쟁과 갈등은 계속되었다.[4] 특히 경제적 성장의 아시아가 불안정과 갈등의 아시아를 발생시킬 것이며,[5]

3)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Avon Books, Inc., 1992).
4)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pp. 360-386.
5)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 218.

‘동아시아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산’ 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6] 그러한 경고적 전망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도전은 거세게 나타났다. 세계 제1의 인구와 공산당 1당 지배의 정치체제로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패권 추구국가로 등장하였다.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의 영토 팽창과 동아시아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거세졌다. 중국을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키면 중국의 정치적 다원화/민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미국의 전략은 기대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의 국제질서는 불가능한 망상으로 보인다.[7]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의 패권적 야망은 노골화되었고 경제적 힘을 토대로 한 공세적 ‘일대일로’ 추진전략은 미국-NATO 동맹을 흔들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그러한 발전에 ‘편승’ 하여 적응하거나 아니면 ‘균형’ 을 잡아 중국의 영향을 봉쇄하도록 시도하게 만든다.[8]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경제가 주된 요소이지만 패권국 미국의 거대 국가전략으로 흡수되었다. 오바마 시기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트럼프는 중국의 도전을 주저앉히려 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미사일문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최우선순위의 과제다.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의 대북정책 노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최대의 압박이 우선되었다. 2018년 이래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도 최대의 압박기조에 따른 대북 제재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제재 동참과 강화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 협력 요구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정권 교체, 북한 정권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

6)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97), pp. 151-193.
7) John J. Mearsheimer,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Haven: Tale University Press, 2018), pp. 1-12.
8)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 218.

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 체제보장을 공언했다.[9)]

중국 시진핑 정부의 중국 민족주의 팽창정책과 트럼프의 미국 애국주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 간 충돌의 경우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되자 2018년 3월에서 6월까지 세 차례나 김정은을 중국에 불러들인 것처럼 북한은 중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전히 유용하다. 중국에게는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가 우선이다. 한국은 중국 패권 확립 정책의 '변방' 으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전개한 한국 압박은 중국의 한반도정책 본질을 말해준다.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 공조체제의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한·미 공조 이완, 한국 내 대중정책 관련 남남갈등 조성 유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편승하여 아시아지역 미국의 제1 파트너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으로 일본의 역할은 더 확대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문제 압박에는 미국 내 투자 확대/일자리 증대 등으로 대응하면서 군사력 강화정책에 편승하여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지역의 안보 역할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북핵·미사일문제 대응과 관련 트럼프 정부와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 동시에 독자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은 약화된 상태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전략핵무기 능력 증강 등 군사력 강화와 '강한 러시아' 기조 아래 경제발전을 위한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는 시리아 문제, 크림 반도 병합, 미국의 INF 탈퇴 등으로 갈등이 부상하였다.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핵

9) 『연합뉴스』, 2017. 5. 3.

능력 확장 선언으로 양국 간 핵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부정적 입장이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북한의 안보 관점에서 이해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한과의 양자 경제협력 및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매개로 남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한반도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현 동북아정세는 패권국 미국과 패권 도전국 중국의 전략적 갈등이 크게 부상한 상태로, 그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10] 남·북한과 미·중·일·러 모두 자국 경제발전 중심의 민족주의 현상이 증대된 상태이며, 사실상 군사력 강화에 따른 군비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핵·미사일 고도화는 역내 질서의 최대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해를 공유하지만 그 방법론은 각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동북아질서의 역동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Ⅲ. 북핵 협상 현황: 협상의 재개, 그러나 서로 다른 목표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2월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내보이고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를 평화올림픽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온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호응하였다.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을 남한을 통해 미국에 접근하였다. 2018년 3월 5일 한국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을 맞은 자리에서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 임을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북한) 비핵화 논의가 아니라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군축회담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10)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전략적 차원을 넘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너무 감정적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의 전술적 차원에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 윤석준,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윤석준의 차밀>, 2019. 5. 13. <bemil.chosun.com>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고 전했다.[11] 이러한 의사는 3월 9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며, 김정은의 정상회담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되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3조 4항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공동성명의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고 선언하였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평양선언의 5조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동조 ①항에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하고, ②항에서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 하였다.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11) “대북특사단 언론발표문,” 『연합뉴스』, 2018. 3. 6.

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는 2019년 4월 현재 ‘영구적으로 폐기’ 되지 않았다.

이 사이 2018. 3. 31.~4. 1 미국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CIA국장의 첫 방북을 통한 김정은 면담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2018.4.26 취임)과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간 미·북 고위급대화 채널이 형성, 양자 간 북핵 관련 고위급회담이 평양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2018. 8. 23. 비건(Stephen E. Biegun)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로 임명되었고, 2019.1.16.~18 김영철을 수행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의 대미특별대표 김혁철과 첫 상면 이후 제2차 미·북 정상회담(2019.2.27.~28, 하노이) 직전까지 비건-김혁철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시설・프로그램 등 핵신고 리스트의 제출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리스트 제출의 절대 불가와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FFVD 의미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된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공동의 비핵화의 개념(의미), 비핵화의 범위, 이행 속도 등에서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예정된 회담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결렬로 끝났다. 미국은 영변 핵단지와 영변 이외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2016~17 기간 중 핵실험과 ICBM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5개의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 없이 일정에 앞서 끝난 것이다. 북한 측은 ‘민생경제 및 인민생활’ 관련 ‘일부’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영변의 폐기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은 북한 측이 사실상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영변 폐기의 범위도 불분명하다고 대응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외무상 리용호는 3월 1일 한밤중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

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 리고 강조했다.[12] 외무부상 최선희는 3월 15일 평양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이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의 핵 포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6·12 공동성명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회담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에 장애를 조성하고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연계한 '미국의 계산법' 을 궤변이라면서 회담 결렬의 원인을 미국 측에 돌렸다. 그리고는 "미국의 강도적 립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 이며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고 하노이 협상 같은 협상을 할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의 계산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13] 북한의 폼페이오에 대한 비난은 4월 18일 외무성 미국국장의 입을 통해 그를 교체하라는 요구로까지 나타났다.[14]

이러한 최선희의 주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실현 불가능한 방법' 을 들고 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방법론' 이 없었다면서 미국의 북미관계 개선 의지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 를 외면하고 오히려 최대 압박으로 굴복시키려 오판하고 있다면서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6.12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 을 찾아야 하며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를 그 기한으로 제시했다.[15]

12) 『연합뉴스』, 2019. 3. 2.
13) 『뉴시스』, 2019. 3. 25.
14) 『조선중앙통신』, 2019. 4. 18.
15)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 4. 13.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고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적절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6] 트럼프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전략적 전환' (strategic shift)이 필요하다면서 전략적 전환이란 " '핵무기가 북한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자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유일한 지렛대' 라는 과거의 역사에서 '핵무기는 북한을 가장 위협하는 것' 이라는 인식의 전환" 이라고 설명했다.[17] 그는 제재 해제는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고" "동시에 이를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4월 24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시한은 없으며 " '선의의 협상' 과 '진정한 대화' 가 진행되는 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향후 미·북 대화는 김정은의 '전략적 결정' 에 달려 있으며 "이는 군사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 이라고 강조했다.[18]

한편 김정은은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오지랖 넓은《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외의 이른바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단하고 "우리(북한)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실천적 행동' 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19] 한·미 공조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상대측에 공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북·러 정상회담(4.25), 중·러 정상회담(4.26). 미·일 정상회담(4.26) 등 한반도문제 관련국 간 일련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

16)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Bilateral Meeting," April 11, 2019. <https://www.whitehouse.gov/remarks/>
17) Voice of America, Korea. 2019.4.16 <https://www.voakorea.com/a/4876966.html>
18) Voice of America, Korea. 2019.4.26 <https://www.voakorea.com/a/4891705.html>
1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 4. 13.

국과 일본이 FFVD를 목표로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단계적 접근' 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미·북 양자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모호성과 불투명성을 유지한 채 단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같은 부분적인 조치를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의 근원적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에 대한 개념(정의)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옛 소련 구성국들이나 리비아의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에서 보듯이 비핵화의 대상, 범위, 이행 절차, 이행 시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로드맵의 협의·합의와 그 이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를 말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이 없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란 전제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비핵화를 조선반도(한반도) 영역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 제거" 라는 군축 차원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그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실현은 근본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Ⅳ.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의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북 간에 진행된 협상에서 '비핵화' 의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개념에 대한 합의는 바로 비핵화의 범위, 내용, 이행 시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설정하거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보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제네바합의 등 미·북 양자 간 합의나 9·19 공동성명 같은 6자(다자)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에 관한 합의가 이행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18년 봄부터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